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35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정책 분석 및 제언

8월 24일로 다가온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잘못된 것이고 공정치 못한 투표지만 나쁘다는 도덕성 보다는 잘못되었다는 합리성에 기반한 투표 거부운동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무상급식 논점의 비교분석, 올바른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복지국가 복지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식을 기조로 하되, 그 구현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또 다른 진실을 공유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1] 나쁜 투표와 잘못된 투표의 정치학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8/17>

[2]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정책의 방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8/22>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나쁜 투표와 잘못된 투표의 정치학

홍재우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I. 딜레마의 주민투표
- II. 나쁜 투표의 도덕성과 잘못된 투표의 합리성
- III. 현실과 전략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고, 주민투표를 위한 유효서명인수를 충족했다" 며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한 추가적 시비는 정치적으로 썩 유리한 것은 아니다. 물론 절차상의 수많은 문제점에 눈감은 판사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 뿐 아니라 법 해석도 다시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주민투표는 그대로 진행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전략과 행동의 양상, 무엇보다 진보진영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간은 많지 않은데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잠시 아래의 글을 읽어보길, 그리고 또 생각해보길 권한다.

I. 딜레마의 주민투표

먼저 주민투표 자체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주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고 주민(국민)발의 보다는 수준이 떨어지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민주성이 생각보다 크게 찬양할만한 것은 아니다. 시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지만 거의 찬성과 반대라는 둘 중 하나만 채택하는 지독히도 단순한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묻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이 올곧이 시민 다수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현대사에서도 국민투표는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 독재자의 의사를 관철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진민주주의 국가치고 대규모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전국적인 국민투표는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 벨기에 같은 경우 전후 왕정을 유지할 것인가 같은 체제결정 수준의 국민투표를 하기도 했지만 정책에 대한 대규모 국민투표는 흔한 일이 아니다. 기초 단위의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영국의 경우도 주민투표는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이 대의제 기구에 대한 압력 행사 정도로 사용된다. 우리처럼 수도에서 유권자 수가 84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특정 정책, 그것도 예산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민투표의 문제점 중 하나는 투표자에게 딜레마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개의 주민투표는 투표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건을 요구한다. 최저투표율 같은 것이 그것이다. 투표 결과를 유효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유효투표율과는 다른 것으로 기권이나 무효 등을 포함한 투표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공직 선거에는 없는 이런 최저투표율 조건을 내거는 이유는 주민투표의 결정이 이미 투표를 정당성을 부여한 대의제 기구의 결정 보다 우선하거나 이를 부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정당성은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직선거가 누구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비해(즉 누구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데 비해), 주민투표에서는 대안이 제한되어 있다는(즉 특정 정책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만 한다는) 점에서 대안의 제한을 인정하는 일정한 규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자는 찬반에 대한 고민 이전에 대안의 제한성에 대한 찬반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인다. 만약 어떤 유권자의 정책 선호 순서가 (투표용지에 나오지 않는 현재 정책 A) > (투표용지에 나온 정책대안 B) > (투표용지에 나온 정책대안 C)의 순서라면, 그 투표자는 B와 C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권을 하든지(즉, 투표에 참여하지 않던가), 혹은 투표에 참여해서 최악인 C를 막기 위해 차악인 B에 투표하던지 하는 결정을 먼저 해야 한다. C에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대로 C에 투표하면 되지만 A가 계속 대안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B에 투표할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야 하는 전략적 판단을 요구받는다. 자신이 B에 투표해도 B의 득표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한 표가 C가 승리하는데 공헌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반대로 B와 C가 일정한 규모의 지지를 받고 참여가 최저요구 수준을 넘는다면 기권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투표자는 B와 C라는 제한된 대안의 짝에 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한다.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딜레마가 함의하는 것은 투표 선택에 포함되는 대안을 누가 정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A와 C라는 경쟁하

는 대안 속에서 누군가 조정된 B를 제시하고 이를 A나 C 하나와 대체할 수 있다면 특정 대안의 승리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누군가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수식문구를 사용한 조건 등으로 선택의 범위를 조정해서 B가 A혹은 C를 대변하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면 투표의 공정성은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주민투표가 투표자나 대안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딜레마를 만들었던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에 대한 소환투표로 떠들썩했다. 역사상 두 번째였고 900만 명이 참여한 최대의 주민 소환투표였다. 문제는 소환투표와 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했다는 것이다. 투표용지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째는 그레이 데이비스를 소환하는데 찬성하는가를 묻는 질문이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지사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만약 찬성표가 50%를 넘으면 두 번째 선택으로 주지사가 선출되는 것이었다. 두 개의 투표와 선거를 한 번에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지만 처음 이 방법은 투표자에게 딜레마를 안겨 주었다. 원래 규정에 의하면 첫 번째 투표 중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만이 두 번째 보궐선거에 투표할 수 있었다.

당시 보궐 선거 후보는 경악스럽게도 135명이나 되었지만 주요 후보는 부지사인 민주당의 크루즈 버스타만트와 공화당의 두 후보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터미네이터 바로 그 사람!) 그리고 톰 맥클린톡 세 명이였다. 소환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만약 소환이 통과되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만 보궐 선거에 참여한다면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차라리 공화당의 유력 후보가 두 명인 상황에서 어차피 데이비스 현 주지사에게 희망이 없다면 민주당 부지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었다. 특히 소환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이런 불합리한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려 해소가 되었지만 흥미로운 상황이 나타날 뻔 했다. 또 민주당의 입장도 곤혹스러웠는데, 소환에 반대하라고 운동하면서도 동시에 민주당 후보를 뽑으라고 선거운동을 해야 했다. 주민투표는 생각처럼 단순하고 착한 직접민주주의의 도구가 아니다.

II. 나쁜 투표의 도덕성과 잘못된 투표의 합리성

지금까지의 얘기는 민주주의나 주민투표 자체의 의미나 현재의 무상급식투표를 보는 보다 전문적 시각이 궁금한 소수를 위한 얘기였다. 조금 한가해 보이는 얘기지만 이런 내용은 무상급식주민투표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방향을 가늠해준다. 자세한 얘기는 뒤로 미루고 일단 현재 진보진영의 전략부터 살펴보자.

현재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진보진영의 입장은 “나쁜 투표, 착한 거부” 라는 말로 표현된다.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권을 할 것인가라는 선택에서 큰 고민 없이 기권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그것은 자꾸 투표 문안을 바꾸는 오세훈 시장 측의 치졸함 때문이기도 하고 33% 투표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나쁜 투표”의 맥락은 의무(무상)급식이 처음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했을 때, 선별적 무상 급식이나 부자급식 반대에 대한 대응 논리로 사용된 내용의 연장선이다. 즉 선별적 무상 급식이 교실에서 아이들의 마음에 선을 긋고 낙인을 찍는다는 주장이다.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아이들이 급식을 받기 전에 먼저 ‘가난의 인증’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정당한 일이다”라고 밝힌 것은 백번 옳은 말이다. 혹자는 복지에 있어 작은 자존심의 문제는 별로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오히려 예산효율과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하는 것이 보다 옳기 때문에 해당자의 객관적 상황을 밝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복지가 삶의 가치를 보호하는 일이라면 약자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 역시 가벼운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복지에 있어 대상자의 자격 입증은 오래된 논란이다. 1930년대 영국 탄광 지역 노동자들의 삶을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서술한 조지 오웰의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을 보면 복지수혜 대상자를 확인하러 오는 공무원들을 방문과 확인을 거부하는 빈곤층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복지혜택을 박탈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집안까지 살살이 까발려지고 싶지 않은 약한 자들의 자존감이 나타나있다.

역사학자 토니 쥬트가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에서 인용한대로 말콤 X는 자존심 강한 그의 어머니가 몇 푼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결코 사회복지사들을 결코 집 안에 들이는 굴욕적인 일은 하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보호의 낙인을 거부하는 자존감은 복지가 가진 자들의 알팍한 시혜가 아니라 분배를 공정히 하려는 사회적 권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존하겠다는 공동체의 의지의 표현이며 그 삶은 유무형의 것을 모두 포함한다. 자존감의 경계는 사회마다 다르겠지만 물질적 복지에 요구되는 조건이 그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무엇보다도 의도적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 보수주의자들이 무상급식이 사회의 화두로 등장했을 때 화들짝 놀랐던 것은 이것이 감세철폐, 고소득누진세 등 재분배를 조건으로 하는 복지국가로 가는 일종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물론 오세훈은 이것을 강남시장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복구하고 정치적 야심을 키울 수 있는 전술적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 정도의 경제 규모와 능력 속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무상급식을 어울리지도 않는 포퓰리즘이네, 부자집 애들 밥을 왜 세금으로 먹이네 하면서 자기 모순적 화술을 동원한 세력들은 무상급식을 두려운 세계로 가는 방향타로 본 때문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아이들 가슴에 못을 박는 가난의 인증제를 고집하는 것은 복지가 자신들이 세운 규칙 속에서 나온 자들에게 베푸는 시혜일 뿐이며 결코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고 교정하는 만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싶다는 표현이다. 무상급식 수혜 대상임을 학교에 밝히지 않고 주민 센터에 따로 신고하는 낙인감방지법 같은 꼼수를 대안으로 내세운 것도 결국 복지의 성격과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시도의 일환인 오세훈의 투표는 분명 “나쁜 투표”이다.

하지만 오세훈의 투표가 “나쁜” 투표임이 도덕적으로 분명하면서도 이것이 나쁜 “투표”이기 때문에 나쁜 투표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나쁜 투표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 도덕적 도전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나쁜”을 규정하는 것도 도덕이지만 “투표”를 규정하는 것도 도덕이라는 도전이다. 흔히 정치적 전략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게 이성애 호소할 때보다 그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투표를 “나쁘다”라는 감성적 언어로 규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래도록 우리는 투표가 시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윤리라고 간주해 왔다. 참여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당이 투표 거부가 웬 말이냐며 비아냥거리는 한나라당의 주장이나 인터넷 알바들의 독설을 간단히 무시하기에는 자기부정의 딜레마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지난 몇 번의 선거 속에서 젊은이의 투표참여를 고무하고, 또 투표참여를 고무하는 것에 대한 법의 제약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운동이 아직도 진행되는 와중에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은 “왜?”라는 반문과 의문에 바로 직면하게 된다. 이 질문 앞에 현재 진보진영의 가장 간단한 대답은 그것이 “나쁜” 투표이기 때문이라는 도덕적 답변이다. 그러나 그 답변은 “선별적 급식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투표해서 다치지 않게 하라”라는 또 다른 도덕적 응답 앞에 무력해 질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지만 투표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여기는 평범한 유권자라면 설령 무상급식의 기초에 찬성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투표장에 나가지 말라는 호소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다. 그것은 도덕적 충동을 요구하는 호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문을 가진 투표자가 그래도 투표에 참여한 이후에는 위에서 말한 투표 문구의 마술이 놓은 덫에 빠지게 된다.

나쁜 투표가 맞이하는 두 번째 도덕적 도전은 보수진영이 만들어낸 선별복지라는 공정성 프레임의 도덕성이다. 쉽게 말하면 이견희 손자로 대변되는 “부자”에 대한 “반감”이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 더 공정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의 주장에는 복지를 시혜에 한정하고, 고도의 정치적 선택이 아닌 저차원의 사회적 정책으로 가두려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도덕적 장치로 본다는 것이다. 아래서 좀 더 언급하겠지만 나쁜 투표의 프레임은 이런 공정성의 도덕을 쉽게 돌파하기 어렵다.

Ⅲ. 현실과 전략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와서 투표에 참여해서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이고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서울시 측의 투표 문구 선정 때문에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회는 전면적인 즉시 무상급식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무상급식이다. 단 대상의 경우 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년으로 나누어 2012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 2013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오세훈 측의 입장은 소득구분 없는 보편적 급식 반대와 하위 30%에게 선별적으로 급식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투표에서 선택할 정책 대안은 이것들이 아니다. 무상급식 찬성 쪽으로 제시된 서울시의회(민주당)안은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고 반대하는 서울시(오세훈) 측이 내놓은 안은 2014년까지 초·중·고등학교의 하위소득 50%에게 단계적이고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그것인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문구의 의도적 변화와 선택은 투표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의문을 제시한다. 즉 실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측의 현실적인 대안이 선택 여부에 들어가 있지 않을뿐더러 주민투표 발의를 요구할 때 내세운 것보다 훨씬 완화된 내용을 반대 측 입장으로 채택한 것이다.

일반적인 개인의 정치적 판단은 전체적인 방향에 동의해도 그것이 구체적인 예산이나 금전적 비용의 문제와 연결되면 보다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현재 문구에 나온 방식으로 하면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찬반이 아니라 범위에 대한 선택을 하게끔 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의 문제를 희석하고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실제로 조선일보 여론

조사에 의하면 오세훈 측 안이 민주당이 중심이 된 서울시 의회 측 안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58.8% : 39.1%). YTN과 동아시아연구원의 결과도 비슷했다. 특히 전면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이 쓰여 높은 세금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70%가 동의했다. 한계레-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도 보편적-전면적 무상급식 안이 선별적-단계적 무상급식보다 낮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구체적 비용(세금) 상승의 위협과 부자혜택이라는 불쾌감이 동반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왜곡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투표가 유효했고 어떤 결론이 났다고 치자. 선택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 실제 비용의 문제는 과장된 것이다. 문제가 있는데 소위 서울시의회/교육청 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매년 초중학교 85만명에 대한 4092억 원이 필요하고 서울시 안이 통과되면 초중고 60만에 대해 2014년 기준으로 매해 3037억 원이 필요하다. 1055억 차이이다. 결국 서울시가 어차피 제공하는 비용의 30%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에 5400억 원, 디자인거리 도로 간판과 블록 교체에 2133억 원을 들였다는 것은 언급하기도 귀찮은 내용이다. 예산, 비용, 세금에 대한 내용은 공갈협박에 가깝다. 문제는 누구나 계산하는 오세훈의 정치적 이득 뿐 아니라 돈을 뛰어넘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있다. 투표가 유효하게 되었고 오세훈 안이 승리한다면 그 사실은 복지정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시혜가 될 것이고 부자를 배제한다는 논리로 가난한 자들을 규정하고 부의 재분배 자격을 박탈하는 역설의 근거가 될 것이다. 오세훈의 투표는 정말 나쁘다.

그렇다면 다시, 투표거부의 올바른 전략적 방법은 무엇인가? 사실 “나쁜 투표” 라는 표어의 단순성은 버리기 어렵다. 옳기 때문이기도 하고 감정을 울리는 공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발만 더 들어가면 설명에 대한 도덕적 도전이 거세다. 그렇다면 나쁜 투표 보다는 잘못된 투표의 논리로 가야 한다. 말이 주는 감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쁘다는 도덕성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합리성에 기반한 주장으로 투표 거부 운동을 해야 한다. 복잡한 논리와 상황을 모두 설명할 필요도 없다.

누군가 당신에게 “왜 이번에 투표하면 안 되는데?”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을래?” 라고 반문하는 것보다는 “A와 B가 있고 넌 A가 좋아. 그런데 갑자기 B와 C중에서 선택하려면 넌 어떻게 할래?” 라고 반문하는 게 낫다. 논리적으로 거칠지만 왜 투표를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훨씬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건 나쁜 투표다라는 것보다는 이 투표가 잘못된 것이고 공정치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외치는 게, 조금 더 나간다면 “가짜 투표” 라고 “거짓 투표” 라고

외치는 게 도덕적으로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훨씬 좋은 전략이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투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자. 결론은 당신 몫이지만 판단의 자료들을 제시해 보겠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33.3%이상이 투표해야 유효하다. 전체 유권자 수는 838만 9406명이고 이중 279만 6469명 투표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주민투표의 사례를 보면 2005년 제주도 행정구역개편 주민투표가 36.7%, 같은 해 청주-청원 통합주민투표가 36.7%, 역시 같은 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주민투표가 60%였다. 2007년 하남시장 소환 주민투표율은 31.1%였다. 같이 치러진 3인의 시의회의원 소환투표 투표율은 37.3%였다. 지난 지방선거시 서울시장 선거의 투표율은 53.9%였다. 오세훈 시장은 47.43%를 얻었고 표로 환산하면 2,086,127표였다. 강남, 서초, 송파의 투표율은 각기 50.4%, 53.0%, 53.4%였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이 세 지역에서만 27만 표를 얻었다.(2011/08/17)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정책의 방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 I. '무상'의 정치경제학
- II. 무상급식 논란의 감상법
- III. 무상급식 논쟁을 넘어 '진정한' 무상보육으로

I. '무상'의 정치경제학

'무상(無償)' 시리즈가 유행이다.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등등. 이 무상에 대한 사회내의 감상법도 각각이다. 무상은 공짜를 말하며 이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불건전한 행위이며 심지어는 후안무치한 망국적 근성이라고 몰아대는가하면, 무상은 보편적 복지의 가장 파격적인 형태이지만 후진적인 복지와 국민위기의 실상을 감안했을 때 가장 적극적인 급여 제공 방식이라고 옹호하기도 한다.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은 전자의 견해를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명제이다. 그 연원은 이렇다. 미국 서부의 한 선술집에서 술을 일정량 이상 마시는 단골손님에게는 점심을 공짜로 대접하였단다. 손님들은 너무 흡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경제학의 거두(巨頭) 폴 사무엘슨(P. Samuelson)은 이에 대해 그 본질을 정확히 밝히는 명제로서 위와 같이 표현했고 이후 이는 경제학자들에게서 정부의 지출에 반드시 국민의 부담이 요구된다는 본질을 알리는 유명한 명제가 되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결국 선술집에서 받은 공짜 점심은 이미 자신이 지불한 엄청난 술값에 충분히 지불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결국 댓가를 치루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다. 맞는 말이다. 특히 국가로부터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납세자의 부담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말은 새로운 것 없는 상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새로운 해석도 가능하다. 이미 과도할만큼 지불했음에도 그 흔한 공짜점심으로 선심 한번 쓰지 않는 맹랑한 상인을 본다던? 정부에 대해 세 부담을 했음에도 직접적인 소득보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지출로 뿌려지고 만다던?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의 형태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 각출당하는 정도는 GDP의 사분의 일에 해당한다 (2009년 현재 25.6%). 그러나 OECD 국가 중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거의 이분의 일에 해당한다. 너무 과한 비유라면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을 상대로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현호박사의 추정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현재 OECD의 33개 회원국 중에서 경제수준이 비슷한 11개국(한국 포함)의 평균 국민부담율은 GDP 대비 29.8%로 25.6%인 우리보다 4.2% 포인트 높고,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GDP 대비 15.6%로 7.5%인 우리보다 8.1% 포인트 높다.

이를 현재 대한민국 GDP 규모(2011 경상GDP 1,162조원)에 적용하면 우리 국민들은 경제수준이 비슷한 12개국들보다 49조원 세금을 덜 내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94조원에 달하는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경제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들 평균치와 비교해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94조에 달하는 공공복지 지출의 확대가 가능하며, 부담하지 않은 49조원을 제한다면 45조원에 대한 복지지출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1] OECD 11

국가	1인당 GDP(미 달러) [2009]	조세 부담율(%) [2009]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 [2007]
Mexico	8,134	17.5	7.2
Turkey	8,711	24.6	10.5
Chile	9,516	18.2	10.6
Poland	11,302	34.3	20.0
Hungary	12,914	39.1	23.1
Slovak Republic	16,282	29.3	15.7
Korea	17,074	25.6	7.5
Czech Republic	18,256	34.8	18.8
Portugal	21,970	35.2	22.5
Slovenia	24,111	37.9	20.3
Israel	26,874	31.4	15.5
평균	15,922	29.8	15.6

() : OECD, IMF 가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복지부문에 있어 공짜점심을 먹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온통 길바닥에, 강바닥에, 호화청사에, 분양장사용 아파트에 쏟아 붓느라 국민들의 가게에서 주름살을 깊게 파고 있는 교육비, 의료비, 어린이집 보육비, 주택부금...등등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불편

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관료들, 그리고 지식인들 일부는 국민에게 공짜점심은 부도덕하다고 설파한다.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급기야 경제가, 국가가 망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공짜점심이 아니라 이미 내가 충분히 댓가를 낸 것이므로 당당하게 향유할 권리라고. 경제개발기후 국가들의 평균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복지지출이 적다고, 아니 비슷한 경제력 규모의 국가들에 비해 아직도 100조원 가까이 덜 받고 있다고, 그리고 복지 때문에 거덜 난 국가는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이들의 맹목적이고 일면적인 거짓된 신념에 의해 복지 없는 경제성장에만 매진한 결과, 우리사회는 오로지 ‘정글의 법칙’ 만이 지배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 세상 풍파에 대해 홀로이 대처해 나가는 정글북 사나이, 패자 부활이 없는 승자독식의 사회가 그 결과이다.

그러나 복지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달려온 선진 복지국가들은 정글을 공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누구나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가시덤불을 없애고 죽음의 늪을 치워 버렸다. 정글의 비극을 맛본 국민들은 ‘모두’의 공원을 위해 자신의 능력에 비례하여 세금을 냈고 그 결과를 함께 향유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지금 불고 있는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열망은 우리 사회를 정글에서 관리된 공원으로 바꾸자는 열망에 다름 아니다.

II. 무상급식 논란의 감상법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마침내 시장직까지 거는 통큰(?)판을 만들어버렸다. 사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은 무상급식 그 자체와 오세훈시장이 언급한 대로 ‘복지포폴리즘’의 확대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각기 논의해 볼 수 있다.

우선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자. 사실 이 문제는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와 기술적인 집행 효과성, 재정 확보 가능성의 판단에 관한 문제이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서울의 초중등학생들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이며 어느 정도 범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2천억에 이르는 급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물론 이에 대한 결론의 도출 또한 모두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97 외환위기 이후 급작스럽게 등장한 결식아동의 문제와 이미 전국적으로 80만명에 이르렀던 급식지원 학생의 규모, 부분 급식을 둘러싸고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반

교육적인 부작용의 문제들을 고려하면, 비록 세계에서 핀란드와 스웨덴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더군다나 오세훈시장이 주민투표에 부의한 방식대로 하위 50% 계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행정적인 비용의 유발 정도가 우심한 면이 있다. 50%지점을 끊어내려면 거의 대다수 학부모형의 소득을 공적으로 추적하여 일렬로 세우는 거대한 작업을 해야 하며, 그 결과로 끊어내는 50% 선에 대해 경제선상에 있는 이들의 동의 여부를 획득하는 작업은 지난한 행정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소득과악율의 낮은 수준과 상대적 박탈감의 팽배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 부모와 아동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평균이하 계층과 평균이상 계층이란 확실한 분류를 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위화감이나 열패감은 숨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의 정도는 전체 서울시 재정의 0.3%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재정동원이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이 문제 자체는 180억원이란 물리적 비용과 엄청난 그 이상의 기회비용을 지불하여 주민투표를 할 사안은 결코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그렇다면, 오세훈시장이 내건 두 번째 이유, 이것이 보편적 복지라는 복지포폴리즘의 시작이며 이를 저지하고 재정과탄으로부터 구하는 성전(聖戰)이라는 측면은 어떠한가? 이는 이미 앞 장에서 본 것처럼 한국의 복지현실에 대한 무지함을 넘어 한국 국민들의 고통의 현 주소를 외면한 사고의 결과라는 점에서 처연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보편적 복지는 결코 국가부도의 원흉이자 포폴리즘의 대상으로 폄하될 수 없는, 인류가 20세기에 안착시켜 놓은 복지국가라는 국가운영질서의 매우 중요한 기조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보편적 복지가 무조건적인 퍼주기 복지이고 무상복지인 것만도 아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의부터 하자. 유명한 닐 길버트(Neil. Gilbert)에 따르면 이는 “경제적 무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은 물론 선별적 복지이지만 모든 복지제공의 형태가 두 가지 만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중간의 모호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세인들이 갖기 쉬운 첫 번째 오류이다. 즉, 보훈처럼 사회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경우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욕구가 있는지를 진단해야 하는 경우는? 경제적 능력을 조사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경우는? 상위 10-20%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주는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이 보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복지인지를 정확히 가릴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양극단이 있고 나머지는 그 사이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 있을 뿐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모든 것을 공짜로 누구나에게 주자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오류가 있다. 보편적 복지의 전형이 사회보험인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그 예이다. 더 나아가 아동수당,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이 그 예인데 보험료나 조세로 이미 상당한 기여를 행한 댓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는 결코 ‘공짜 점심’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상당 정도 평상시의 기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란 모든 부문을 그렇게 하자는 것인가? 여기에 세 번째 오류가 스며들 수 있다. 어느 선진복지국가도 결코 모든 복지제도를 보편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긴급하고 완벽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핵심적인 영역을 보편적 복지로 해결할 뿐이다. 2차세계대전 직후 영국은 무상의료를 택했고, 1950년대 스웨덴은 아동수당을, 1980년대 핀란드는 무상교육을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삼았을 뿐이다.

이런 오류를 제거하고 나면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정책 구현상의 ‘기조’이며 ‘경향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현재 왜 이런 기조와 경향성이 요구되는가? 지금까지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선별적 복지를 기조로 삼아 달려온 한국사회가 현재 드러난 사회적 난맥상, 즉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중산층의 와해, 빈곤여성·빈곤아동·빈곤노인·빈곤장애인의 대규모 존재, 인적자본의 훼손, 성장동력의 쇠퇴 등등의 문제가 심화되어왔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이 문제를 경제성장과 선별적 복지로 해결하자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을 문제의 해결자로 내세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더 포퓰리즘에 해당한다. 애초 보편적 복지가 갖고 있는 개념의 다양성과 정책의 경향성으로서의 의미를 부정하고 “부자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경박한 개념과 경직된 정책으로 논쟁을 몰아가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 쓰나미’의 전초전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III. 무상급식 논쟁을 넘어 ‘진정한’ 무상보육으로

어쨌든 무상급식 논란은 24일 서울시 주민투표에 의해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을 일이다. 그렇지만 무상복지 시리즈의 또 다른 국면은 무상보육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 같은 무상임에도 무상급식과는 달리 커다란 사회적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오로지 한나라당 내부에서만 찻잔속의 태풍처럼 이야기될 뿐.

그 이유는 자명하다. 알다시피,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케하자는 결단은 무상을 ‘복지포플리즘’으로 스스로 규정한 여권과 보수층으로부터 행해졌다. 이미 이명박대통령은 2012년부터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실시를 선언한바 있다. 사실 그것이 2011년 4월 27일 재보선에서 여권이 타격을 받은 뒤 나온 터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받았었지만 어차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및 진보복지진영에서 주창하던 것이었기에 논란의 대상일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이미 이명박정부에서 아래 표와 같이 아이사랑플랜에 의해 발표된 내용을 실천에 옮긴다는 점에서 커다란 쟁점 사항이 아닐 수도 있었다.

< 2 >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	중장기보육계획	
	새싹플랜()	아이사랑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세 유아 보육 및 교육(5 미만) 국가 책임제 실시 - 0-2세 60% 대해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지원 - 3-5세 전체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 전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130% 기본보육료 30% , 기본보조금 '10년 5 까지 도입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보육료 지원 아동 : '05년 41.1%⇒ '10년 80.8% ▶ 공공립 보육시설 확충 : '05년 1,352개소 ⇒ '10년 2,70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0-4세 소득하위 80% 보육료 전액지원 ▶ '11년 5세 아동 전체 보육료 전액지원(;어촌은 2010년) ▶ 약지역에 국공립 시설 확충 2012년 2,119 소 확충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인 황우여의원이 0세아 무상보육을 천명하는 등 무상보육의 연령 범위는 5세아에서부터 더욱 확대되는 경로를 거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예견된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무상급식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커다란 논쟁 사항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무풍지대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무상보육에 있어서 논쟁의 핵심은 ‘무상보육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현재의 무상보육은 공식적으로 책정된 보육료에 대한 지원으로만 국한되어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 이용에 들어가는 전 비용이 보육료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실제적인 보육비용 전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공식적인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무상보육이라 한다면, 이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공교육비용은 무료지만 사교육비 수준이 훨씬 부풀려져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의 의미가 훼손되는 상황과 똑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아래의 표는 서울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보육비 사례이다. 서울시가 정한 보육료 수납 월 한도액은 231,000원이지만 활동비로 4만원, 특별활동비로 18만5천원, 총 22만5천원을 더 납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집이 특기활동비를 명목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해주는 보육비만으로는 인건비나 시설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기활동이라는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고, 부모들은 아이에게 특기활동이 필요한지를 따지기 보다는 아이가 특기활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연령대의 아이들과 함께 보육을 받아야 하니, 방치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특기활동을 시키고 있는 실정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3> B		2008	3
		()	
		231,000	
1	(6)	40,000×6	=240,000
		65,000	
		30,000	
		30,000	
		30,000	
		30,000	
()		456,000 (231 + 가 22 5)	
1)	231,000	4	(.
)	
2)	100,000		

무상보육정책에서 이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은 핵심을 빠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제어장치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무상보육 주장은 거의 공허하기까지 하며, 심지어는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제어장치란 무엇인가?

핵심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하여 민간 어린이집에서의 실질비용 인상 유인을 억제하는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국가는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6년 정부와 여성계, 재계, 노동계, 종교계 등이 체결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대비 30%까지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것을 명시하였고, 정부는 같은 해 ‘1차 중장기보육계획(새싹플랜)’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개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사회협약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명박정부는 새싹플랜을 수정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대폭 축소했음을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 정권의 의지를 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육비 부담 상한제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이 고시된 보육료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시설 설립비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민간시설들은 이 비용을 특기활동비로 보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종일반 기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보육료를 마치 반일반 비용인 것처럼 하고 오후에는 특기활동이라고 해서 별도의 비용을 추가해서 받고 있기도 하다.

원론적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보육시설처럼 정부 고시 보육료만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더불어 시설이 영리가 아닌 비영리기관으로서 서비스의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육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과 보호자가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설치와 보육료 부담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하며, 보육비에 있어서 국가와 부모가 부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목표치를 정하고, 부모들이 일정 정도만 부담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보육서비스의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서비스 이용의 대가가 아닌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원리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비용의 부담으로 전환될 필요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대로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 무조건 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신중하게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해보자. 지금 보편적 복지의 오해와 왜곡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과열된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고 진정된다면, 복지권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는 원칙을 정하면서도 급여와 부담의 합리적 조화 원칙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논의하는 국면이 필요하다. 즉, 복지국가는 복지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식을 기조로 하되, 그 구현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또 다른 진실을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2011/08/22)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